『한국노총 신문스크랩』
오늘의 주요기사

2020. 11. 11 (수)

언론사명	주 요 기 사 내 용	페이지
경향신문	O '코로나 전사'라는 미명 아래 희생 강요당하는 의료노동자들	1
경향신문	O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 보탠다는데	1
경향신문	O 전태일이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까닭	2
경향신문	O '전태일50' 신문 나왔다	3
한겨레신문	O 플랫폼과 로봇에 갇힌 '21세기 취안타이이'	4
한겨레신문	O 특수고용직 노동자 85%가 "고용보험 가입 원해"	4
한겨레신문	O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5
한겨레신문	O 정부 "ILO협약 비준 맞춰 법 개정" 노동계 "독소조항 안돼"	6
한겨레신문	O 우리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	7
한겨레신문	O 김종인식 '노동 좌클릭' … 당 내부서 먹힐까	8
한겨레신문	O 국민 87% "택배기사 처우 개선된다면 배송 늦어도 돼"	9
한겨레신문	O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9
한국일보	O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엑스포, 어느 때보다 의미 크다"	10
동아일보	O 민주당,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10
서울신문	O '케미 강조' 이낙연… '선제 액션' 이재명	11
서울신문	O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의힘·정의당 손잡고 민주 압박	12
세계일보	O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85% "고용보험 가입 원해"	12
조선일보	O "민노총 지휘 받는 어용노조 안 된다" KBS 1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13
조선일보	O 국민의힘·정의당 손잡았다… "산업재해 방지 협력"	14
중앙일보	O 우버의 고향 캘리포니아 "우버 기사는 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14
매일경제	O 김종인, 정의당과 정책협의 "산업안전 초당적 힘 합쳐야"	15
한국경제	O 특고 85% "찬성", 사업주 88% "반대"… 특고 고용보험 어쩌나	16
한국경제	O 정의당 손잡은 김종인 "중대재해처벌법 협력"	16
한국경제	O "노동존중 실천"	17

경향신문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27면 오피니언

'코로나 전사'라는 미명 아래 희생 강요당하는 의료노동자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역은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의 이면에 최전선에서 분투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이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보건의료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코로나 전사'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시민건강연구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발간해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한 '보건의료노동자, K-방역을 말하다, 더 나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안'은 코로나19 속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낸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내 의료기사, 미화노동자, 간병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군 24명을 심층 인터뷰한 보고서는 치료 공간인 병원이 종사자에겐 위험한 장소였음을 전하고 있다. 충분한 훈련도 없이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종사자들은 감염이 의심돼도 충분한 검사를 받지 못했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보건의료인력은 159명에 달했다. 밖에선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정작 병원 내부와 주변에선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수개월씩 가족과 친구, 병원 내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했다. 어떤 노동자는 직급별 차별에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고, 병원의 손실이 늘며 계약연장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도 처했다. 심지어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한 간호사들의 수당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집행을 지자체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몇 년 주기로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마다 이번처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당국은 "영웅 같은 숭고한 희생자가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보고 보호해 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백서는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별도의 진단검사 트랙과 건강지원 시스템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안전을 누릴 수 없다.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국민 건강도 계속 지킬 수 있다. 당국이 무겁게 새겨야 할 일이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27면 오피니언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 보탠다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규정해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처벌토록 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만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사고로 사업주가 징역·금고형을 받은 비율은 0.56%, 2013~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이 선고받은 평균 벌금액은 448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끊자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과거 산업안전이나 노동자 권익 보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과 보수정당 반대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사업장 안전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초당파적 민생 문제라는 상식적 판단을 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다. 지도부는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이날 밝힌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 기업주와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수구정당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까지 포괄하는 합리적 보수로 환골탈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민주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안법 등 개정으로 후퇴하더니 근자에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 나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보다 처벌 범위를 좁히고 강도도 낮추겠다는 뜻이다. 중대재해에 따르는 사업주의 책임 비용을 높여 사업주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토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 사망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수야당마저 입법 취지에 호응하는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적기이다. 민주당 때문에 법안이 누더기가 되거나 실기한다면 두고두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26면 오피니언



조운찬 칼럼
논설위원

전태일이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까닭

"오늘도 보람 없는 하루를 보내는구나. 하루를 넘기면서 아쉬움이 없다니. 내 정신이 이토록 타락할 줄은 나 자신도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67년 2월14일, 열아홉 살 전태일은 생애 첫 일기를 썼다. 어린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평화시장 미싱사에서 재단사로 업종을 바꾼 직후였다. 그러나 전태일은 자신의 뜻과 달리 공장 주인의 처제를 좋아하게 되면서 업주에게 충성하는 종업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초심과 거꾸로 가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다.

전태일의 초창기 일기에 노동현장의 부조리는 보이지 않는다. 재단사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공들을 돌봐주겠다는 온정주의만 넘쳐난다. 그러나 이마저 허용되지 않는다. 전태일은 '시다들을 잘 대해준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미싱사 여공이 각혈로 핏덩이를 토해낸 것을 목격하고는 본격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재단사 모임 '바보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도 냈다. 그즈음 전태일은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현실적으로 애통한 것은 너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펜대를 할퀴는 것"이라며 평화시장의 열악한 실태를 전한다.

전태일은 노동운동의 투사이자 열사이지만, 노동현장을 기록한 '작가'이기도 하다. 전태일이 분신한 직후 조영래 변호사는 죽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화시장과 그곳 사람들을 취재했다. 또 여러 차례 이소선 여사를 찾아가 전태일의 성장과정을 들었다. 1983년 나온 <전태일평전>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전태일의 육필 원고가 없었다면 <전태일평전>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전태일이 생전에 쓴 일기, 수기, 진정서 등이 인용되거나 녹아들어 있다.

전태일은 생전에 노트 5권 분량의 일기를 썼는데, 일부가 분실돼 3권만 전한다. 전태일은 또 자전소설 형식의 '회상 수기'를 썼다. 수기에는 전태일의 가출-행상-평화시장 견습공-재단보조-재단사 등 성장 과정이 담겼다. 재단사가 되어 한창 노동운동을 벌일 때에는 평화시장 노동 실태조사 설문지,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작성했다. 전태일은 또 자신의 삶을 주제로 세 편의 소설 초안을 썼다. 이밖에 친구에게 보낸 여러 편의 편지가 전한다. 전태일이 1967~1970년에 쓴 글들은 뒷날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1988)로 출간됐다.

전태일의 학력은 서울 남대문초등학교 2년, 대구 청옥고등공민학교(중등 과정) 1년이 전부다. 짧은 학력으로 일기, 편지뿐 아니라 자서전, 진정서, 소설까지 쓰기란 쉽지 않다. 전태일의 육필 수기에는 문법과 맞춤법의 오류가 적지 않다. 학교 공부가 부족한 데다 체계적인 글쓰기 학습을 익히지 못했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전태일에게 세상이라는 훌륭한 교사가 있었다. 그는 미싱노동자가 점심을 풀빵으로 때우고, 각성제를 먹어가며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하는 평화시장 실태를 알려 바로잡고 싶었다. 그 열정으로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

일기에서 시작된 전태일의 글쓰기는 대통령 진정서, 모범업체 설립계획서와 같은 실용적 글쓰기로 확대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 전태일은 글쓰기를 통해 자본주의 모순과 인간 소외 문제를 깨치게 됐다. 그의 글에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존재한다"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와 같은 철학적 단상이 적혀 있다. 작가 조지 오웰은 글쓰기 동기를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했는데, 전태일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려는 '순전한 이기심'에서 출발해 '정치적 목적'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전태일에게 미학적 열정이나 역사적 충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김소월의 시를 즐겨 읽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니스 상인> <비곗덩어리>와 같은 소설도 접했다. 그가 회고록을 쓰고 소설까지 구상한 것은 부조리한 세상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전태일은 노동하고 글을 쓰고 투쟁하면서 생각을 벼렸다.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의 사유와 실천을 '전태일 사상'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은 인간 사랑, 밑바닥 생활로 각성된 실천의식,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정신이다. 전태일은 진정, 시위,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지만,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최후의 선택은 자신을 버리는 것. 1970년 11월13일 몸을 사른 그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이 구호에 전태일 사상의 고갱이가 있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10면 사회

'전태일50' 신문 나왔다

분신 50주기 기념해 발행
다양한 노동자 얘기 담아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전 열사를 추모하고 '이 시대 전태일'의 현실을 조명한 '전태일50' 신문(사진)이 나왔다.

전태일50 발행위원회는 10일 "현직 언론사 기자, 사진가, 활동가들이 참여해 제작한 전태일50 신문이 16면으로 10만부가량 발행돼 전국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단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태일50' 신문을 위해 개인 187명, 단체 120곳이 발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언론인 홍세화씨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경향신문 김지환·이효상 기자 등 12개 언론사 13명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다. 사진가·만평가 등도 재능기부로 함께했다.

신문에는 봉제공장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봉제공을 비롯해 방송계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패션업계 어시스턴트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성화고 학생 등 2020년 전태일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가 쓴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의 가상 대화', 송경동 시인의 '이소선 어머니에서 김미숙 어머니까지',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뮤지션 하림씨 인터뷰, 50년 전과 2020년의 직업병 비교, 노순택 사진가의 '그을린 전태일의 달력' 화보 등도 실렸다.

신문은 1부당 1000원에 판매되며, 판매기금은 비정규직·해고노동자 연대기금으로 사용된다. 지난 9일 기준 8만2700부가 사전 신청돼 전국으로 배포됐다. 전국 78개 배부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홍 편집위원장은 "이미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어서 단결이 무너졌고 차별이 제도화되면서 연대도 사라져간 오늘, '전태일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할까'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플랫폼과 로봇에 갇힌 '21세기 취안타이이'

박민희의
시진핑 시대 열전 _10



불경기와 코로나19로 공장과 식당 등에서 실직한 노동자들, 대학 졸업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도 배달 노동에 뛰어들고 있다. 메이퇀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 6만여명, 대졸자 17만명 이상이 이 회사의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배송비는 더 낮아졌고, 같은 금액을 벌려면 더 많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박민희 | 논설위원.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 중국 인민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중국을 인터뷰하다〉(공저)를 썼고, 〈중국과 이란〉 등의 책을 번역했다. '혐중'에 반대한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동행을 희망한다. minggu@hani.co.kr

2019년 10월의 어느 날, 전동 자전거 핸들을 쥔 주다허의 손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중국의 양대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 어러머의 배달원이다. 이날부터 2㎞ 배송 시간이 32분에서 30분으로 또다시 줄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식당에서 음식 준비 시간이 길어져 배달이 늦어도 어김없이 무거운 벌금이 매겨진다.

한국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있다면, 중국에는 메이퇀(美團)과 어러머(餓了麼)가 있다. 지난 9월 중국 월간지 〈인물〉은 이 두 플랫폼에서 일하는 음식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의 노동 현실을 6개월 동안 생생하게 취재해, 교묘한 노동착취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6년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메이퇀과 어러머는 각각 초뇌(超腦)와 방주(方舟)라는 이름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에게 배달 일감을 배분하고, 배송 경로와 시간을 지시한다. 라이더들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평점이 떨어지고 벌금을 물어야 하며, 해고될 수도 있다. 라이더들은 컴퓨터 시스템이 지시한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교통신호를 어기고 역주행을 하며 목숨을 내놓고 달린다. 2017년 상반기 상하이에서 2.5일마다 한명씩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졌고, 2018년 청두시에서 7개월 동안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약 1만건, 사고는 196건, 사상자는 155명으로 집계됐다.

〈인물〉이 취재한 라이더 수십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배달 건수는 절반으로 줄 것이라며, "배달은 저승사자와의 경주"라고 말한다. 웨이라이라는 라이더는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료 노동자가 서둘러 출발하다 차와 부딪혀 오토바이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떨어졌다. 동료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웨이라이는 멈출 수 없었다. 손에 든 음식 배달 시간이 늦었고 새로운 주문도 들어왔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중국사회과학원 쑨펑 연구원은 "배달노동자들은 불이익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시스템의 요구를 맞추려 애쓰고 그 정보가 시스템으로 전송돼 빅데이터로 저장되면, 알고리즘은 모두 이렇게 빨리 배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다시 배달 속도를 높이게 된다"고 분석한다. 배달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배달 시간을 맞추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시간을 또다시 단축해버리는 악순환이다. 중국에서 600만명이 넘는 배달노동자들이 알고리즘 시스템의 통제 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거리를 달린다.

불경기와 코로나19로 공장과 식당 등에서 실직한 노동자들, 대학 졸업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도 배달 노동에 뛰어들고 있다. 메이퇀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 6만여명, 대졸자 17만명 이상이 이 회사의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배송비는 더 낮아졌고, 같은 금액을 벌려면 더 많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의 노동자들이 베이징 시내 사무실 앞에 모여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이런 구조에서는 회사의 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중국 내 음식 배달의 약 65%를 차지하는 메이퇀의 2019년 3분기 주문은 25억건인데 주문 한건당 이윤은 2018년 동기에 비해 0.04위안 늘었고, 비용은 0.12위안 줄었다. 2020년 2분기 메이퇀의 수익은 22억위안(37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5% 증가했다.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21세기 중국 청년들은 한국의 청년들과 나란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통제 속에 갇힌 '동지'다. 중국에서도 언젠가 1980년대 한국과 같은 노동운동이 일어나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덧 낡아 버렸다.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음식배달·택배 등 플랫폼으로 통제되는 노동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 윤종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교수는 "80년대 한국의 대규모 노동운동은 산업 고도화와 대공장화, 중산층 확대를 기반으로 일어났고, 국제적 환경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했다"며 "지금 중국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당·국가의 강력한 탄압 등 매우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중국 청년들은 도시의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된 '농민공'이란 차별의 굴레를 벗기도 전에, 첨단기술의 통제와 국가의 강력한 감시라는 이중·삼중의 굴레에 매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무렵까지는 중국 노동운동의 희망이 확산됐던 시기였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관리체제와 노동환경 개선,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는 파업의 물결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농민공들은 현실의 모순을 명확히 자각하고 더 나은 현실을 꿈꾸며 노동운동에서 길을 찾았고, 〈전태일 평전〉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등을 읽으며 '취안타이이'(전태일의 중국 발음)가 준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품었다.

시진핑 정부는 노동자들의 각성과 권리의식 성장을 '사회 불안정' 요소로 판단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고, 2016년 자선법, 2017년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을 시행해 시민단체들이 모금을 하거나 홍콩·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암흑시대'를 맞은 많은 노동운동가들은 체포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었다. 판이라는 성만 밝힌 한 노동운동가는 지난 9월 좌파 사이트 궁차오(工潮)가 마련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노동자 조직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당국의 괴롭힘과 체포, 억압 때문에 활동이 매우 힘들다. 노동운동에 참여하려는 조직가, 운동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봇도 노동자들의 경쟁자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께부터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는 자동화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다. 광둥성 둥관시 정부는 2014~19년 9만1천대 로봇을 설치해 28만명의 노동력을 줄였다고 밝혔다. 2019년 전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는 165억달러였는데 그 가운데 54억달러어치가 중국에 판매됐다.

중국 신세대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기계처럼 판에 박힌 노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노동하던 1세대 농민공들의 자녀들인 지금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좀 더 자유롭고, 보람과 성장이 있는 일자리를 갈망한다. 하지만 농민공들의 노동으로 건설되고 발전한 중국의 대도시는 이들에게 동등한 시민권과 임금, 복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노동은 한없이 불안정해지고, 권리를 외칠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사회에 절망으로 저항하는 이들도 있다. 광둥성 대도시 선전의 싼허인력시장 주변에서 살아가는 '싼허청년'(三和青年)들은 고정된 주거지도 없이, 돈이 떨어지면 배달이나 건설 일용직으로 버는 일당에 의지해 '하루 벌어 3일 노는' 삶을 살아간다. 이들 가운데 신분증도 팔아버리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자포자기한 채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싼허다선'(三和大神·싼허의 신)으로 불린다.

싼허청년들의 생활을 연구해 〈어찌 돌아가고 싶지 않겠는가〉(豈不懷歸)란 책을 펴낸 사회학자 톈펑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싼허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도시의 생활을 봐왔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기대도 높고 권리의식도 강하고, 불공평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다. 하지만 권리를 지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함의 방식, 즉 대도시에서 아무렇게나 끼니를 때우며 죽음을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싼허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착취당하고 떼먹히고 차별당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다"였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버린 국가'에 저항하고 있다.

변화를 향한 분투는, 힘겹지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쉼 없이 유동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한 '21세기 부산계급' 청년들인 음식배달·택배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많은 이들이 주목한다. 〈중국노동통신〉(CLB)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배달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시위, 파업 등이 확인된 것만 104건이라고 집계했다. 중국 최대 '쇼핑의 날'인 11일 광군제를 앞두고도 파업과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순펑, 윈다 등 대형 택배회사들의 무리한 가격 경쟁은 소규모 하청 택배회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졌고, 몇달치씩 임금을 떼이게 된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중국의 휘황한 전자상거래를 떠받치는 모세혈관인 택배 노동자들의 1건당 배달 수수료는 5~7마오(85~120원)까지 떨어졌다고 〈중국신문주간〉은 전한다.

미-중 신냉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반중'의 격랑이 일자, 시진핑 지도부는 거대한 내수시장에 기대 자력갱생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마련했다. 2억9천만 농민공들의 빈곤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력갱생을 지탱할 내수시장'은 신기루일 뿐이지만, 공정한 분배와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번번이 통제와 억압에 부서지고 있다. '21세기 중국의 전태일'들은 오늘도 빨간불이 켜진 길에서 손에 땀을 쥐고 배달 자전거를 탄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85%가 "고용보험 가입 원해"

노동부 3300여명 설문조사
이직 사유, 낮은 소득·열악한 환경
일방적 계약해지·종료도 18% 꼽혀
고용보험료 노·사 절반씩 부담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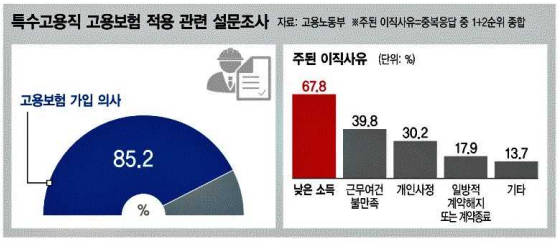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열명 중 여덟명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다수가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주된 이직 사유는 낮은 소득과 일방적 계약해지 등이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명을 상대로 10월10~20일에 진행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맺은 이들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5.2%였다. 직종별로는 학습지 교사(92.4%)와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가입 의사가 높았다. 택배기사(79.8%)와 골프장 캐디(68.3%)가 희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주된 이직 사유(중복응답, 1·2순위 종합)로는 낮은 소득(67.8%)과 업무시간·작업량 등 근무여건 불만족(39.8%)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거론한 이들도 17.9%에 이른다. 이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불안 요인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의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은 2년 이상이 76.7%이고,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9.5%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를 1순위로 꼽은 이가 31.7%에 이른다.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를 1순위로 택한 이도 30%였다. 보험료는 기존 노동자들이 내는 방식대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87.3%)을 선호했다.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월 소득의 0.6%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기존 노동자들이 분담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0.8%이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조사 결과"라며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한겨레 hani.co.kr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27면 오피니언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 읽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분명해지면서 '트럼프 이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미국의 새로운 파워엘리트는 누구인지, 한국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미국과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제는 이런 것들이 화젯거리다.

하지만 트럼프의 시대가 끝났다고 성급히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그의 재임 동안 미국에서 터져 나온 증오와 폭력, 혐오와 차별, 민주주의와 법치의 파괴, 공적 국가의 붕괴와 권력의 사사화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누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시대를 탄생시키고 떠받친 구조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오래 남을 것이며, 만약 우리가 트럼프 임기의 종료와 더불어 그 하부구조를 함께 망각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이름의 트럼프가 어디선가 재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럼프를 악당으로 만들어 만악의 근원으로 치부하는 담론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리버럴 지식인과 언론, 서유럽의 주류 세력들은 트럼프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도 갖추지 못한 트럼프가 미국인 절반의 지지를 받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 이전의 세계를 돌아보라. 2007년 미국 주택금융시장 붕괴, 2008년 세계경제 위기, 2009년의 남유럽 부채 위기로 이어진 고통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하층민과 중산층이 파산, 실업,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1년 5월 스페인 60개 도시에서 터져 나온 항거의 이름은 '분노한 자들의 운동'이었고 그들의 슬로건은 "정치와 은행의 손에서 민주주의를 되찾자"였다. 같은 해 가을에 미국 전역을 휩쓴 월가 점령 운동은 '1% 대 99%'의 미국 사회를 규탄하고 있었다. 트럼프 '이전' 얘기다.

트럼프의 시대는 이처럼 우아한 민주주의 정치가 대자본, 은행, 투기꾼들과 손잡고 춤춘 위선의 무도회에 오물을 끼얹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피억압자의 반란이 아니라,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것에 대한 환멸, 그것이 부재한 세계의 추악한 침전물들의 부상이었다.

백인우월주의와 여성혐오, 정치권력의 후원 아래 자행된 증오폭력, 민주적 규칙과 관용의 파괴, 법치주의를 유린한 권력 남용, 탈진실의 정치도구화, 도덕성에 대한 경멸,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 이 모든 파괴적 힘이 솟아올랐고, 그 힘을 자극하고 규합하여 정치적 자원으로 만들 줄 알았던 자가 바로 트럼프였다.

말하자면 미국의 민주주의와 여성, 흑인, 라티노 이주자들을 죽인 것은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그와 손잡고 칼춤을 춘 '트럼프 세력'이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무엇보다 백인 중산층과 남성 산업노동자들이다. 여기에는 인종, 젠더, 계급이라는 여러 결의 불평등이 교차한다. 흑인, 여성, 이주자 등 배제되어온 집단의 지위가 성장하면서 이들을 향한 공격과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런 사회 환경이 트럼프의 집권이라는 정치 변동으로 이어진 것은 포퓰리즘 정치의 위력에 힘입은 바 크다. 현대 민주정치의 근저에는 인민주권의 신념 체계가 있는데, 선동가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규칙을 파괴하면서 인민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한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는 탁월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트럼프의 시대는 기존 체제의 많은 조력자를 필요로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보수 세력의 기회주의는 트럼프 체제의 불가결한 일부였다. 그들은 종종 트럼프에 격렬히 반발하며 품위를 지키려 했지만,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민주주의 파괴에 협력했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는 많은 공범자를 갖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내지 못한 진보주의자들, 사회적 배제에 동참한 백인 중산층과 남성 노동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붕괴에 동참한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이 거대한 공범 구조는 지금도 견고하다. 트럼프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은 깊어가고,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은 미약하며, 야만적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격 살인이 만연한데, 그들은 이익을 지킬 노조도, 위로받을 공동체도 없이 홀로 분노를 견디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무사한가?

한겨레 hani.co.kr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11면 사회

정부 "ILO협약 비준 맞춰 법 개정" 노동계 "독소조항 안돼"

난관 부닥친 노동조합법 연내 개정

정부, 노조법 개정 왜 서두르나
20년 끈 ILO협약 비준 적기 판단
국내법과 충돌 없게 노조법 개정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내세워

노동계 "국회 본회의 상정땐 총력 투쟁"
경영계 달래려 독소조항 포함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단체행동권 되레 축소시킬 것"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도 빠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노총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땐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오해를 설명한다며 이례적으로 '팩트체크' 자료까지 작성했지만, 양대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외려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을 임기 내 마치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 **정부가 노조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2개국이 비준한 국제적인 노동기본권 보장 규범이다. 1996년 오이시디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받고 이행 약속까지 했지만, 20여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또 2011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유럽연합(EU)은 우리 정부에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전문가 패널 활동)를 개시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 가운데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29호 모든 강제노동 금지 △87호 결사의 자유 보호 △98호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권고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고 강조한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2004년 대법원 판례로 산별노조 가입만 허용됐던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제한 규정이 사라지는 셈이다.

■ **노동계 반대 핵심 쟁점은?**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달래기' 차원에서 여러 독소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본문이 남아 있는 한 노조 설립을 신고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격을 정부가 심사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1년이 넘어서야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대리운전기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노조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와도 연결된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정부의 법 조항 해석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가 좌우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량으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은 더 큰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생산 등 주요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점거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사업장의 '일부 점거'는 허용하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부분적인 직장 점거마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개정안은 사실상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는 기존보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핵심협약 비준을 먼저 하고, 유예기간 1년 동안 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 대선 국면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안에 핵심협약 비준을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노동존중'을 표방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온 정부와 여당으로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조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상황이어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조법 개정은 핵심협약 비준 목적에 맞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미뤄왔던 노동기본권 신장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는데, 사회적 대화를 거치며 경영계의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박준용 기자 sun@hani.co.kr

한겨레 hani.co.kr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26면 오피니언

우리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



김기식 칼럼

모두 진보의 기반인 노조, 특히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에 도전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청년세대에게 진보에 투표하라 할 수 있는가. 86세대의 20대가 진보였던 것이 시대의 반작용이었다면, 지금 20대의 보수화는 기존 진보세대의 도그마와 이루어 놓은 기득권에 대한 안주, 감성의 차이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 시대를 가르는 기준은 민주 대 반민주였다. 그리고 1997년 정권 교체 이후 진보와 보수라는 기준이 정치사회적으로 자리 잡았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들자고 나섰을 때 당시 운동권 동료들로부터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념이 진보를 규정한 시대였다. 당시 필자에게 진보는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모든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거부하고, 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한때 진보적이었던 것도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면 도그마이자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고집하면 보수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정치적으로 처지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교차되고, 가치나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 프레임이 지배하는 오늘의 정치 현실에서 과연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 잣대로서 유의미하게 국민에게 수용되고 있는가. 현실 정치는 그렇다 치고,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비전에서 진보는 구조적인 문제에 얼마나 솔직하며, 변화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는가.

90년대 이후 진보는 과거 수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사민주의를 수용하며 스웨덴을 모델로 한 복지국가를 꿈꿨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실현 가능한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스웨덴 모델은 높은 경제성장률,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저성장의 구조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역삼각형 인구구조, 높은 청년실업률과 불완전고용의 확산이다. 이 조건은 정책을 잘한다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비용을 부담할 미래의 청년세대에게 복지국가는 희망일 수 있을까. 이런 조건에서 지속가능한 현실적 최선은 국가가 '국민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지키는 것일지 모른다.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구조화된 복지제도를 부채로 충당할 수는 없다.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제 세율을 인상하고, 오늘 감세를 추진한다. 노동자의 반이 면세자이고, 자영업자 면세 기준도 상향되었으며, 각종 조세 감면제도는 계속 연장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기존 복지국가체제든, 기본소득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곡학아세 수준의 주장이다. 복지제도로 돌려받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사회가 되어야 고소득자,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진보가 역진적이라 비판하는 간접세인 소비세가 25%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며, 현금복지급여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진보는 어떻게 복지국가의 미래를 감당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물론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도 점점 벌어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연공급 임금구조는 노동자 안에서도 기성세대의 기득권이다. 3차 산업 중심의 고용구조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대책일 수 없다. 노동권이 강한 독일조차 2017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5.1%로 32%인 우리보다 높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주장되고, 임금구조 개편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연공급 구조는 직무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는 당연하지만, 산업구조상 발생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등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주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별 교섭을 통해 독일처럼 대기업의 인상폭은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상폭은 높이는 연대임금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모두 진보의 기반인 노조, 특히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에 도전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청년세대에게 진보에 투표하라 할 수 있는가.

진보는 20대의 보수화를 우려한다. 86세대의 20대가 진보였던 것이 시대의 반작용이었다면, 지금 20대의 보수화는 기존 진보세대의 도그마와 이루어 놓은 기득권에 대한 안주, 감성의 차이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결핍된 진보의 집단주의는 보수의 국가주의와 다르지 않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보수, 조직과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진보가 오늘의 세대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까.

우리 시대 진보는 특정한 이념과 정책이 아니다. 끊임없는 성찰, 모든 절대적인 것에 대한 회의, 변화에 대한 담대한 도전만이 진보를 진보답게 한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이다."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식 '노동 좌클릭'…당 내부서 먹힐까

정의당 중대재해법에 호응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0일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소신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정경제 3법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중도층 겨냥 행보를 이어온 그가 이번에도 '좌클릭' 의제를 던져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이란 이야기다.

김 위원장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위원장은 야당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진보적 정책을 앞장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정의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합치진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뒤 국민의힘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여성·장애인 문제에 부쩍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위원장 직속으로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구조나 처우 개선,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문제 등에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에 관한 논의 또한 무르익지 않았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과잉처벌이나 중복처벌 등

약자 의제 앞세워 정치판 주도 포석
의원들 법안명칭·내용 등 거부감 커
표심 잡기용 제스처에 그칠 수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비교하면서 법안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의당 발의 법안은 구성요건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명칭에 '기업처벌법'이라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거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의 전향적 행보가 자칫 표심을 잡기 위한 화려한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중복 통과시키는 것에 관해 부담이 있다"며 "이번엔 법안 명칭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박혀 있다 보니 예방보다 징벌을 우선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생명의 문제를 두고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최근 산안법 개정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과 원청의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안전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산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보다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한겨레 hani.co.kr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13면 종합

국민 87% "택배기사 처우 개선된다면 배송 늦어도 돼"

권익위, 과로사 잇따르자 의견조사
"택배비 올려 처우 개선" 74% 동의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된다면 배송 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은 감내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등이 발생한 데 따른 의식 변화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8일 동안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이뤄진 '택배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628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50%를 부담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해 가입률이 낮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의무가입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9%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택배 분류업무를 배송업무와 분리하는 것을 두고도 93.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비용 부담 상승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87.2%, "택배비 인상액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3.9%로 조사됐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정과 택배 대리점 갑질 근절,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hani.co.kr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18면 경제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이사회·ISS 이어 세번째 반대 의사
금융권 최초 '주주 제안' 좌초 위기

케이비(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권 최초로 주주 제안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결권 자문사들의 잇단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20일 케이비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케이비금융 우리사주조합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3호(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4호(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에 대해 반대하라는 보고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케이비금융 이사회와 국외 의결권 자문사 아이에스에스(ISS)가 잇달아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세 번째다. 케이비금융 이사회와 아이에스에스는 케이비금융 이사회에 이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추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이유를 들었고 이에 덧붙여 케이비금융의 노사 대립도 근거로 삼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은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노사관계 △위임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고 규정돼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적힌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고 최근 케이비금융의 노사 관계와 위임장 경쟁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과 케이비금융은 각각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주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는 참고서류를 제출했다. 우리사주조합과 케이비금융 이사회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쪽 이사를 선임했을 때 주주 이익과 노조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비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추천한 후보들은 노사관계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 리스크 전문가들이라 노조 이익을 대변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사실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쪽에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사외이사는 그 속성상 비밀 엄수 의무 등 각종 법적 책임을 지고 기업의 장기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렵다"며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단 감시와 견제 위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한국일보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12면 종합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엑스포, 어느 때보다 의미 크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축사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제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10일 '한국판 뉴딜 일자리, 지역에서 앞장섭니다'는 주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 엑스포의 개막식 환영사에서 김용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로 경제·고용 부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엑스포의 의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영성 한국일보 사장도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업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축사에 나선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한국판 뉴딜은 중앙정부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실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요 축이 되고 제 역할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고, 일자리의 기회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도 "취업자 수가 수개월째 줄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전북도지사)은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는 우리 삶을 한 차원 끌어올릴 기회"라고 평했다.

변태섭 기자

●개막식 주요 참석자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충남 논산시장),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 이재강 국방전직교육원 원장, 권혁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 이수영 엑스포 조직위 집행위원장

東亞日報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06면 종합



민주당,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서울신문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06면 정치

'바이든 시대' 맞는 與 대권 주자 다른 행보

'케미 강조' 이낙연… '선제 액션' 이재명

이대표 "美와 K방역 공유" 기대감
이지사 "대북정책 前 남북 나서야"
코로나로 '바이든 인맥 쌓기' 차질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항소심' 유죄로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2강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의 발걸음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는 두 대권 주자의 구상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밝힌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주당과의 접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케미'(화학적 결합)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소화한 대부분의 공개 일정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바이든 시대를 맞는 이낙연의 구상'이라는 통일된 메시지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바이든 당선인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영국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신의 시그니처 브랜드인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향후 미국과 K방역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공동 협력 체계까지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에 일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시하기 전 남북이 '액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북측 역시 내년 1월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개성공단 재개선언과 내년 초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꼽으며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가 선순환 관계임을 인지하고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남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와 유의미한 인적 접점이 없는 두 사람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한반도 TF를 통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바이든 정부와 인연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차기 주자들의 '워싱턴 인맥 사로잡기' 경쟁은 당분간 어려운 전망이다. 차기 대권 후보들이 코로나19로 모두 국내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울신문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06면 정치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의힘·정의당 손잡고 민주 압박

김종인, 간담회에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
취지 공감 표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주호영도 "처벌 더 강화… 정의당안 논의"
민주 오늘 발의… 정책위는 산안법 개정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주로 재계 입장을 대변한 보수정당이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관련 법안에 손을 내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도리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원내대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초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 협력한다고 밝히고, 민주당도 법안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성안 중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총과 시민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드디어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 안과 정책위 안의 방향은 다르다. 정책위 안도 조만간 발의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면서 "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법 개정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세계일보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012면 사회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85% "고용보험 가입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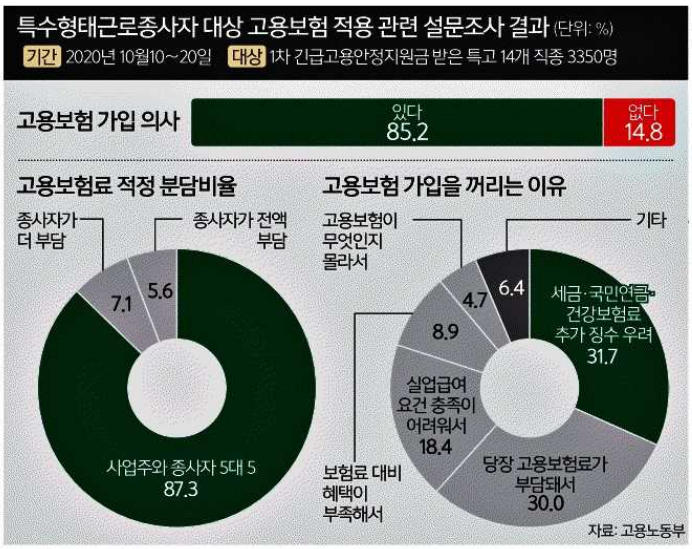
46%가 월소득 100만~200만원
절반, 세금 추가부담에 가입 주저
87% "사업주와 보험료 5:5 부담"

이동수 기자 ds@segye.com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할 것을 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특고 종사자 중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정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 10일간 진행됐다. 직업별로는 학습지교사(92.4%),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등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희망 인원 비율이 적은 직종은 골프장 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이나 이들도 10명 중 7~8명은 가입을 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와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87.3%)가 '5:5로 동일하게 부담'을 택했다. 종사자가 더 많이 부담(7.1%)하거나 전액 부담(5.6%)을 원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고가 생각하는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은 월 소득의 0.6%(49.9%), 0.8%(41.9%) 정도였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3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30.0%),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18.4%) 등이 뒤따랐다. 중복응답을 포함하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 추가 부담을 우려하는 특고가 과반(55.4%)이었다.

특고 10명 중 9명(89.6%)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원(45.5%)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24%), 200만~300만원(20.1%) 순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50.6%)이라고 답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7.9%)로 답한 응답자도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朝鮮日報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23면 문화

"민노총 지휘 받는 어용노조 안 된다" KBS 1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허성권 위원장 단독 후보 공약 "정치편향 KBS 2노조에 맞서 언론의 자율성 회복할 것"



장련성 기자
작년 7월 중앙지검 앞에서 '시사기획 창'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 시위하는 KBS 노동조합원들.

KBS 양대(兩大) 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이하 KBS 1노조)이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한다. 진보 정치를 앞세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2노조)에 맞서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언론사 산별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KBS 1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허성권 현 KBS노조 부위원장은 10일 "교섭대표 노조로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민노총 산하 KBS 2노조는 어용노조가 되어 버렸다"며 "우리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적 노동운동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결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민노총 투쟁 지침과 보도 지침 등을 따르는 2노조와 달리, 우리는 언론으로서 자율성을 가진 산별 노조를 추구한다"면서 "민노총 탈퇴 의사를 가진 언론사 노조, 출판·인쇄 노조 등이 참여하는 미래형 미디어 노조 연맹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허 후보 측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추진위원회 설치, 취임 6개월 내 산별 노조 가입 조합원 총투표 실시, 무노조 직원 목소리 적극 반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수 노조를 차지하고 있는 KBS·MBC·SBS의 경우 언론노조가 3사 경영진과 단체 교섭을 공동 진행하는 등 단일 노조처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 언론노조의 경우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세력과 연대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 등 '정치위원회 정치규약'을 갖춘 민노총에 언론노조가 가입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KBS 1노조의 가입을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KBS 1노조 관계자는 "금속 노조가 주축인 민노총은 제조업 중심이고 투쟁 일변도여서 언론노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원 1200명 정도인 KBS노조는 오는 24~26일 모바일 투표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동흔 기자

朝鮮日報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10면 정치

국민의힘·정의당 손잡았다… "산업재해 방지 협력"

김종인 "산업재해 초당적 해결"

국민의힘은 10일 정의당 및 노동계와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 재해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을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 우리 당의 외면으로 자동 폐기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심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은미 원내대표는 "노동자가 안 죽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계 조작을 한다"며 "정부는 건설 노동자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 건설 노동자 수가 대폭 감소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노동 현안을 두고 정의당, 노동계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였다. 김정환 기자

중앙일보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B02면 경제

우버의 고향 캘리포니아 "우버 기사는 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주민투표서 주의회가 만든 법 제동
"규제하면 일자리 줄어" 공감 얻어
최저임금 120% 보장, 건보료 보조



우버 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볼 경우 사업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EPA=연합뉴스]

우버의 고향이 결국 우버를 되살렸다. 우버 기사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통과돼, 주 의회가 만든 플랫폼노동 규제법안이 뒤집힌 것이다. 우버의 고향인 캘리포니아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면서도 우버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 선택을 했다.

지난 3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우버·리프트 기사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58.4%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민발의제는 주민이 법을 직접 만들거나 기존 법을 폐지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난해 만든 플랫폼 노동 규제법(AB5)은 힘을 잃었다. 이 법안은 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를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직원임에도 '독립계약자'(프리랜서)로 분류돼 실업보험·휴가 같은 노동권을 못 누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AB5 법을 공개 지지해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바이든에게 65% 표를 주면서도 노동 규제에선 유연성을 택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승했지만, 주민투표 내용을 보고 (이곳의) 자유주의적 성향에 감을 잡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민발의안 통과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주는 '긱 이코노미'의 합법적 존속이 가능해졌다. 발의안에는 승차 공유와 배달 앱에서 일하는 이를 개인사업자로 보되, 회사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할 시 건강보험료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버는 '규제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AB5에 반대하면서 '대다수 종사자들은 유연하게 추가 일감과 소득을 얻기 원한다'는 논리로 주민발의안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이 내용을 다른 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플랫폼 업체들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적 절차를 거쳐 노동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브스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미국 운송산업에는 대선만큼 중요한 투표"라며 "미국 5900만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종사자를 잇는 '플랫폼 경제'는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 확산세지만, 고용과 사회보장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 배달·가사·육아 등에 종사하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000명. 이중 업체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3%인 1만6000명이다(2월 과학기술정통부 발표).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방지 정책간담회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김종인, 정의당과 정책협의 "산업안전 초당적 힘 합쳐야"

정의당 발의 '중대재해처벌법' 金 "공감대 형성…반대 안해"

좌클릭 가속에 당내 우려도

보수·진보 정당이 한목소리로 '노동안전권 보장'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10일 국회에서 연출됐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행사에 진보정당인 정의당 측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좌클릭' 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과 정의당 간 입법 및 정책 연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낸 데 이어 좌클릭 행보로 해석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인 소신은 물론 그간 보수 혁신과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또 김 위원장은 "법을 통과시키는 데 각 당 방침을 떠나 국회가 전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의당이 발의했든 국민의힘이 발의했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도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안전이 비용이란 생각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선 보수정당의 '좌클릭'을 두고 염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원도급 사업주에 민사든 형사든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과잉 입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한국경제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04면 경제

특고 85% "찬성", 사업주 88% "반대"… 특고 고용보험 어쩌나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앞서 경제단체들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가 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특고 종사자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 '특고 고용보험' 설문
10명 중 8명 이상 "가입 희망"
9월 한경硏 조사선 63%가 반대
입법과정 '조사 신뢰성' 논란 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85.2%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교사가 92.4%로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을 버는 종사자 중 87.2%가 가입을 희망해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보험료는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87.3%가 '사업주와 5 대 5 분담'이라고 답했다. 임금 근로자와 같은 방식이다. '종사자가 일정 비율 더 많이 부담'은 7.1%, '종사자가 전액 부담'은 5.6%였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9.9%)이 월 소득의 0.6%를 희망했고, 41.9%는 임금 근로자와 같은 0.8%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 고용부 조사 결과는 앞서 경제단체들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특고 종사자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68.4%였다.

지난달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특고 관련 기업 151곳을 조사해 특고 사업주의 88%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주체에 따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각 주체의 조사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경제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06면 정치

정의당 손잡은 김종인 "중대재해처벌법 협력"

여야, 재보선 앞두고 노동계 표심 잡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협조의사를 밝혔다.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정의당과 입법 협력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에 신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장서 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서자 경제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종인 "초당적 협력해야"

김 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법안(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시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金 "산재 사망 때 기업이 보상 당연"
징벌적 손배도 반대할 이유 없다"
지상욱 "20대 때 폐기 사과한다"

민주당,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이낙연 "산업안전은 당파 문제 아냐"
예산 처리한 후 입법 본격화 예고

해당 법안에 담겨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산재 사망 같은 경우 당연히 업체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의당 안은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명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김 위원장은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훨씬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중대재해법 제정운동본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때)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에 방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의 '초당적 협력' 언급에 "환영한다"며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도 출범시켰다. 산업안전 이슈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만 경제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산안법에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더 분명히 명시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정도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기업 관련(산재)이 있고 세월호 같은 사안이 있는데 기업 관련은 산안법을 개정하고 세월호 같은 문제는 다른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또다시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법안의 과속 처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의힘의 한 경제통 의원은 "(정의당 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킬 방안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고은이/이동훈 기자 koko@hankyung.com

한국경제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A06면 정치



"노동존중 실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